

제 39회 정기포럼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실과 방향

- 일시 : 2004년 4월 1일 (목)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한국자원봉사포럼
- 후원 : 삼성사회봉사단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Korea Volunteers' Forum)은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을 자원봉사학자 및 중견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학회 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임원구성

·회장 : 이제훈 (삼성사회협력위원회 상임고문)

·총무 :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고문 :

최일섭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대 회장)

이윤구 (인제대학교 총장, 한국자원봉사포럼 2대 회장)

조해녕 (대구광역시 시장, 한국자원봉사포럼 3대 회장)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 한국자원봉사포럼 4대 회장)

·운영위원

고진광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사무총장)

구혜영 (광진구자원봉사센터 소장)

김길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김성경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배 (한국청소년개발원 전문위원)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민경춘 (삼성사회봉사단 상무)

박영숙 (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박재진 (<주>미래텍 사장)

박현경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이강현 (볼런티어21 사무총장)

이상진 (학교자원봉사연구회 회장)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정갑진 (새마을중앙회연수원 부원장)

최성균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장)

□ 사무국

우) 100-151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E-mail : kovof@hanmail.net

H-page: www.volunteerforum.org

간사 : 임은화

차 례

포럼일정 1

시민자원봉사현장 2

발 제 3

이강현 (볼런티어21 사무총장)

지정토론 1 19

**주성수 (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제3섹터연구소 소장)**

지정토론 2 23

김동훈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지정토론 3 29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포럼(회원)입회 신청서

포럼 일정

15:00~15:30 등록 및 접수

15:30~15:50 개회식

- 국민의례
- 시민자원봉사헌장 낭독
- 개회사 : 이제훈(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15:50~17:00 주제발표 및 토론

- 주 제 :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실과 방향"
- 좌 장 : 김길수(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 발 제 자 : 이강현(볼런티어21 사무총장)
- 지정토론 : 주성수(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제3섹터연구소 소장)

김동훈(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이창호(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17:00~17:30 전체토의 및 폐회

시민자원봉사헌장

서 문


새 천년을 앞두고 인류는 세계평화와 번영, 풍요로운 삶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진정한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의 공적 사회제도는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인도주의의 발로이며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의미한다.

기 본 정 신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을 믿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다.
- 우리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꾀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우리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한다.

행 동 강 령

- 우리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특성에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시민은 개인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상응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우리시민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대상자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킨다.
- 우리시민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기관내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며 필요시 지역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발제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실과 방향

이 강 현 <볼런티어21 사무총장>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실과 방향

이 강 현
(블런티어21 사무총장)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60년대까지 ‘자원봉사’라는 낱말은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더구나 ‘선거자원봉사’라는 말도 실제 활동은 있었으나 쓰여지지 않았다. 1971년 삼선개헌 저지를 앞세운 야당의 호소에 부응한 오천여 대학생들의 대선 투개표 야당측 참관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으나 누구도 그것을 자원봉사활동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 때의 선거부정감시활동은 헌정 역사상 최초의 합법적이고 또 조직적인 선거자원봉사활동이었다. 이후 선거는 유신정부의 출현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었고 87년 6.10 항쟁으로 선거권이 부활되었으나 개정된 선거법으로 금권, 관권 선거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90년대 이르러 불법부정선거 감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가 경실련, 흥사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인 선거감시활동에 일반 시민이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때의 자원봉사활동은 깨끗한 선거를 하기 위한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과 감시활동을 비롯하여 적발된 사례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활동까지 선거자원봉사활동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그러나 정당과 당원이 아닌 한 어느 누구도 특정 후보나 정당을 반대 또는 지지하는 발언이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점철된 선거법은 수많은 불법선거 사례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반신불수의 축제로 만들었다. (한편 93년부터 논의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은 94년과 95년에 열렸던 두 차례의 공청회가 열렸으나 ‘선거자원봉사자’를 법안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의 범위 내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 끝에 법안은 폐기되었다.)

개혁이 미진하고 공선협 활동에만 만족할 수 없었던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은 실정법 위반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총선낙천낙선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선거자원봉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즉 투표참여와 감시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인 부적격 후보자 반대운동을 펼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여론은 낙천낙선의 엄청난 파장에만 관심이 쏠렸고 이 운동이 새로운 형태, 그러나 당연히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인 선거자원봉사활동인 측면이 간과되었다.

2004 총선을 맞이하여 시민운동단체들은 종전의 공명선거감시와 낙천낙선운동뿐만 아니라 부문별로 낙천낙선대상자 또는 지지당선자를 선정하고 활동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

여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정리, 인터넷에 공개하는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공선협은 ‘클린존’을 설치하고 각 후보자의 서약을 받고 전문가(세무사, 변호사)의 철저한 선거자금관리검증을 내세우고 선거자원봉사활동의 폭을 전문분야로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색다른 선거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모색하던 볼런티어21과 한국청년연합회는 그동안 언론에서도 누차 거론되어온 무보수선거자원봉사운동을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비록 이 운동이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돌발적 사태로 특정 정당 지지도의 급격한 상승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와서, 후보자 모두에게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동등한 숫자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게 하려는 취지가 성취되기 어렵다는 판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제62조에 근거한 위법 가능성 제기에 따라 이 운동은 중단되고 말았다.

본 발표는, 중단되었지만 많은 후보자의 열망으로 새로운 선거자원봉사활동의 가능성을 열어준 2004총선 무보수선거자원봉사운동의 내용과 경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혀둔다.

I. 제 17대 총선의 특징

■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중심, 책임정치, 정책정치 중심의 정치풍토 마련을 위해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투표하게 하는 투표방식 도입

■ 17대 국회의원 정수 299명으로 증원

: 지역 선거구를 16개 늘어난 243석, 비례대표 10석 늘어난 56석을 증원하여 16대보다 26명이 늘어난 299명으로 국회의원 정수 확정

■ 미디어 선거

: 합동연설회 및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신문, 방송 등의 각종 미디어매체를 통한 선거운동 확대

■ 고비용 선거구조 혁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창출 위한 높은 사회적 의지

: 선거비용의 투명한 운용과정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및 불법선거운동 신고에 대한 포상금(최대 5000만원)제도 등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사회적 의지 고양

■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 전개

: 선관위의 선거부정감시단,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과 더불어 시민단체들의 공명선거운동과 낙천낙선 및 지지당선운동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 전개

II. 왜 무보수선거자원봉사운동인가

■ 시선전환! 감시운동에서 참여운동으로

유권자와 네티즌의 부정선거 감시운동은 이제 공직선거 때마다 활발하게 실행되는 단골 활동이 되었습니다. 감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정치가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성숙한 선거와 정치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출마자와 지지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의 의식변화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이제 성숙한 정치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 유권자운동이 감시운동을 넘어 한단계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보수 선거자원봉사운동은 부정을 찾아내는 감시자의 눈에서 적극적인 참여자의 눈으로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운동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 돈 안쓰는 선거가 깨끗한 정치를 앞당긴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 선본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실제로는 일당 3~4만원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15대 총선의 경우 자원봉사자 일당 등에 13억을 쓴 후보가 낙선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불법적 관행을 악용하여 유권자들도 선거 시기를 용돈을 버는 시기로 여긴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유권자의 달라진 모습을 뒤흔친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무보수로 선거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시민활동의 힘을 발휘하여 돈 선거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가 있는 후보자는 정직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룬다!

당선을 최우선시하는 후보자나 당원의 경우에는 규제와 감시가 심해지더라도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결국 각성된 유권자의 공개적이고 대안적인 선거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후보자들의 지나친 타 후보 비방, 망언이나 선거브로커들의 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숙한 정치축제의 장으로 만듭니다!

선거 시기는 후보자들이 내놓는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 속에서 정치를 생활 속으로 가까이 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민주시민정치교육의 장이 됩니다. 정치인들의 비리와 사리사욕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가 극에 달하는 이때에 선거자원봉사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선거가 정치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이런 성숙한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Ⅲ. 선거자원봉사운동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 세미나명 : 무보수 선거자원활동의 의미와 추진방향
- 일 시 : 2004년 2월 25일(수)
- 참가자
- 기조발언 :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참여운동의 방향 : 이강현 불런티어21 사무총장
- 주제발표1 : 무보수 선거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과제 : 신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주제발표2 : 17대 총선과 시민참여선거봉사운동의 추진방향 : 박홍근 KYC 공동대표
- 패널토론 - 신두철 중선관위선거연수원 박사
 - 권혜진 공선협 정책교육실장
 - 신종원 YMCA 시민개발부장
 - 고진화 한나라당 영등포갑지구당 위원장
 - 김학규 민주노동당 동작갑지구당 위원장

[기조발언 내용]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참여운동의 방향

- 새로운 차원의 선거자원봉사활동 : 이슈 중심이 아니면서 제3의 입장인 공선협의 감시운동을 극복한 형태이며 적극적인 참여운동

[주제발표 내용]

발표1 : 무보수 선거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과제

- 우려되는 정치현실
 - ① 정치의 인격화 :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 ② 자원봉사의 순수한 의도가 선전용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음
- 올해 선거는 유래없이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깨끗한 선거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감시운동이 더더욱 필요
- 시민운동의 방향은 제도를 강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발표2 : 17대 총선과 시민참여선거봉사운동의 추진방향

- 쌍방향적인 변화를 이루는 정치개혁운동 -감시운동의 의미도 있음
- 시민참여선거봉사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참여운동이며 선거감시운동의 적극적 과정이며 아래로부터의 참여운동

[패널토론 내용]

- 감시운동, 감시기구지원영역, 후보 진영 지원 및 지지, 당선운동 등 시민참여의 스펙트럼이 넓어짐
- 공선협과 같은 감시 역할, 후보자 지지봉사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육성,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정치를 박재화하지 말고 기존의 시민영역 차원으로 끌어내어 시민사회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
- 후보 지원활동의 경우 신념과 가치의 동일성이 담보되어야 함
- 유권자 자가진단, 정당 또는 다른 정치인에 대한 판단작업 필요
- 자원봉사자의 자발성과 후보 및 당에 대한 지지도 중요
- 초기부터 참여하도록 해야 중요한 역할 수행 가능

[종합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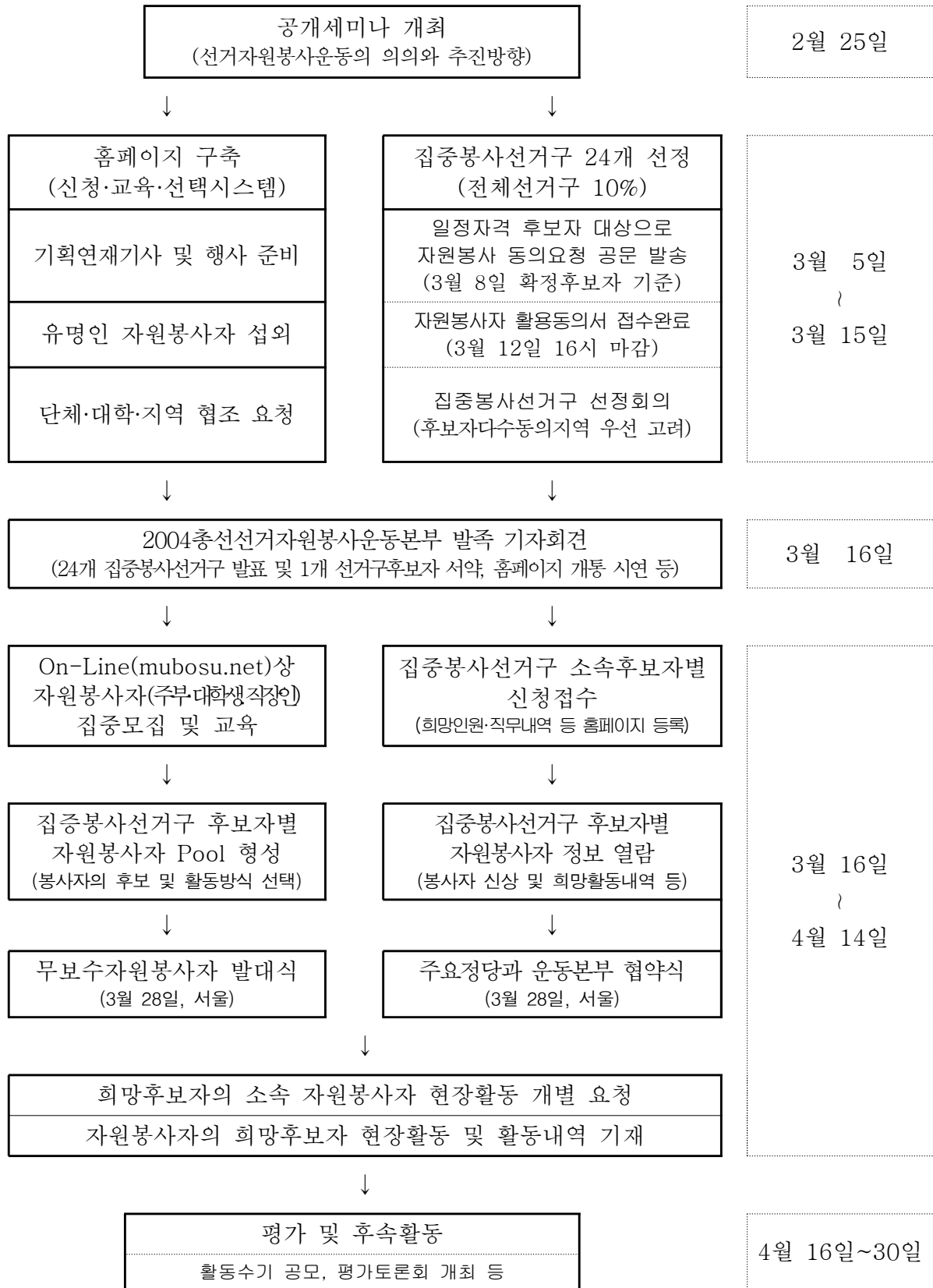
- 이 운동의 의미를 정치인들이 이용하거나 운동본부가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살 경우 중립성이나 운동취지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음.
- 지지자를 모아 당별로 배치한다면 극복 가능하리라 봄.
- 시민에게는 정치 교육의 기회가, 정치인들에게는 돈 없는 선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활동이 되도록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IV. 추진개요

1. 추진취지

- 돈 안 드는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도의 수립 및 감시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로 나선 정치인과 선출하는 유권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므로 본 운동을 통해서 쌍방향적인 의식개혁을 추구하고자 함.
- 특정정치인을 반대·지지하는 인물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 개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자발적 선거참여라는 공익활동을 최대한 독려·지원함으로써 선거가 시민의 정치교육과 화합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여하고자 함.
- 중립적인 자원봉사운동을 실제로 선거현장에 접목시켜 봄으로써 교육프로그램과 활동매뉴얼 개발 등 자원봉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 운동의 안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2. 추진개요



3. 무보수선거자원봉사운동본부 활동원칙

1) 자원봉사은행 운영의 원칙

: 자원봉사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후보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한다.

2) 수칙 준수의 원칙

: 자원봉사자와 후보자 선본은 운동본부가 정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중립성의 원칙

: 운동본부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지원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다.

V. 추진계획안

1. 집중활동지역 선정

1) 선정취지

본 운동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 선거구의 10% 범위(24개) 이내에서 자원봉사자 집중활동선거구를 선정한 후 교육 및 정보제공

2) 선정과정

- ① 원내교섭단체 또는 지방선거 5%이상 득표한 정당인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소속 후보자가 3월 8일 현재 3인 이상 확정된 지역을 대상(단, 위의 3개 정당 이상이 실질적으로 등록 불가능한 선거구의 경우 지역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외 적용)으로 활용설문지 3월 9일 발송 및 3월 12일 16시 접수 마감
- ② 해당선거구 소속 3개 정당 이상의 후보자가 동의했거나 지역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이 동의한 선거구를 ‘집중활동선거구 후보지역’으로 선정
- ③ 3월 13일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최종 확정
- ④ 3월 16일 발족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

2.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계획안

1) 목적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돈 선거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능동적인 의식개혁을 도모하고자 시민참여선거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

2) 세부 목표

■ 시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 층의 자원봉사활동으로 기획하여 참여기회를 열고, 이를 지원한다.

■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학습의 장에서 시민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성숙한 유권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이 운동이 정치문화로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제안을 경험에 기반하여 도출한다.

■ 선거자원봉사활동의 업무를 개발하고 활동전체를 운영함으로서 자원봉사의 새로운 분야로 개척하고 선거자원봉사 관련 교육 커리큘럼과 활동 매뉴얼을 개발한다.

■ 외부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기위한 합작사업의 사례를 창출한다.

3) 무보수 선거자원봉사자 활동과정



4) 자원봉사자 주요 업무내용(안)

	업무 내용		업무 내용
1	인터넷, 이메일 업무	6	방문자 응대
2	전화홍보 업무	7	사진촬영 및 기록
3	사무행정 업무(문서작성, 복사 등)	8	지인 찾기
4	기사 스크랩	9	여론 및 정책 조사
5	사무실 정리 및 청소	10	홈페이지 관리

5) 무보수선거자원봉사자 활동수칙

(1) 자원봉사자의 진가 발휘하기! 책임감 있는 업무 완수!

: 자원봉사자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수칙입니다. 자원봉사는 계약에 의한 활동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매너를 잘 지켜서 기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든다.

: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노력합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서며, 먼저 인사합니다.

(3)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4) 떳떳한 자원봉사자의 양심으로 돈 봉투, 현물 제공 등 정면 거부!

(5) 공정한 선거, 나부터 실천한다. 혼탁선거주범인 불법선거운동, 선거동원 안하기!

(6) 다른 사람들과 공동 활동을 할 경우에는 확실한 사전협의를 하자

(7) 투표 참여는 선거자원봉사자의 기본!

(8) 활동 후에는 반드시 반성을 해보도록 하자.

(9) 선거자원봉사운동의 교육, 활동, 평가의 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기

VI. 추진경과

1. 2004 총선 무보수선거자원봉사운동본부 추진경과

2월 11일 : KYC, 볼런티어21의 무보수선거자원봉사운동 추진 합의

2월 17일 : 사업시작 전 공개토론회 개최 합의 및 세부계획 착수

2월 25일 : 시민참여선거봉사운동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3월 3일 : 세부업무계획 수립 합동회의 개최(볼런티어21 교육장) 계획안 확정

3월 5일 : 집중활동지역 선정계획 수립 및 리스트 구축

3월 8일 : 합동사무국 운영시작 (서대문구 충정로 KYC사무실내)

3월 9일 : 홈페이지 제작업체 계약체결

3월 9일 : 홈페이지 도메인 확정 (<http://www.mubosu.net>)

- 3월 9일 : 공동기획단체로 문화일보 참여 확정
- 3월 9일 : 집중활동지역선정을 위한 후보자 동의서 접수용 공문 발송
 - 3월 15일까지 총 48개 선본 응답(동의선본 총 45개, 거부 선본 총 3개)
- 3월 10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운동의 적법성 질의
- 3월 12일 : 공동기획단체로 미디어다음 참여 확정
- 3월 12일 : 16대 국회 대통령 탄핵 가결
- 3월 12일 : 2004총선 무보수선거자원봉사운동본부 활동 중단
- 3월 15일 : 운동본부 해산
- 3월 16~17일 : 2004총선 무보수선거자원봉사운동 추진 중단과 관련된 보도자료 등 배포

2. 집중활동지역선정을 위한 후보자 동의서 접수 결과

- 3월 12일 16시 현재 3인 이상 후보자가 동의한 선거구를 후보지역으로 자동 선정하여 이중 연락처 등이 확보된 450여 후보에게 이메일 및 팩스로 동의 요청서 및 설문지 발송
- 2004년 3월 15일 기준 2004총선 무보수선거자원봉사운동 동의(참여) 후보자 : 총 45명
- 설문 응답 : 총 42명

1) 설문 결과

(1) 소속정당별 응답자 구성분포

소속정당	N	%
한나라당	7	16.7
새천년민주당	8	19.0
열린우리당	11	26.2
자민련	4	9.5
민주노동당	11	26.2
무소속	1	2.4
합계	42	100.0

(2) 이번 선거에서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N	%
예	42	100.0
아니오		
합계	42	100.0

(3) 무보수 선거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N	%
참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11	22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8	16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비용 절약을 위해	7	14
유권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23	46
기타	1	2
합계	50	100.0

(4)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한 담당자를 배치할 생각이 있습니까?

	N	%
예	38	90.5
아니오	4	9.5
합계	42	100.0

(5) 무보수선거자원봉사운동본부에서 귀 후보에게 자원봉사자를 중계한다면 활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N	%
예	42	100.0
아니오		
합계	42	100.0

VII. 중단사유

1. 운동의 적법성 논란

선관위 질의 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7항1)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돈 선거 방지와 후보자 및 유권자의 의식개혁을 통해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해가기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할 과제이다.

2. 총선과열양상과 자원봉사자 악용가능

탄핵정국에서 바라보는 17대 총선은 여느 총선보다 과열, 혼탁 양상을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순수하고 선량한 뜻으로 선거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활동이 악용

1)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 7항 누구든지 인쇄물, 시설물, 기타 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다. (1997. 7. 1 대법원 판결 97도1416)

될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작금의 정치상황이 무보수 선거 자원봉사자가 설 자리가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하였다.

3. 탄핵반대 여론으로 인한 운동의 편파성 시비 가능

탄핵가결에 대하여 비판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70-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가 특정 정당에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주최측의 의도와 상관없이 편파성 시비가 일어나고 운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나오며

새로운 선거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무보수 선거자원봉사활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보다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르게 하려던 계획은 탄핵정국의 유탄에 맞아 중단되었다. 이 운동을 후원하였던 문화일보는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저항운동에서 시작된 시민운동이 불법선거 감시운동으로 이어졌고, 낙천낙선운동에서 정보제공과 지지당선운동으로 발전했으며, 중단되었지만 다수의 유능한 선거자원봉사자 양성 및 매칭 시도까지 한 단계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과 같이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시도된 무보수선거자원봉사의 두 축인 후보자 진영의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기대를 걸었던 자원봉사자 매칭이 어렵게 된 것을 아쉬워하는 후보자들이 많다. 네티즌과 지역주민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On/Off-line 상에서의 대대적인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자원봉사를 지원할 시민들의 호응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거가 축제이어야 하는데 지나친 규제로 축제 분위기는 커녕,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수 없게 제정된 선거법과 선관위의 법 제정 정신을 저버린 좁은 의미의 해석이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가로막은 걸림돌은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의 유급 선거자원봉사를 무보수선거자원봉사로 바꾸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허락되는 방향으로의 선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1>

무보수 선거자원봉사자 활용 설문지

선거구명	(지역)	소속 정당	
후보자명		작성자명	
연락처	Tel. /Fax.	E-mail	

아래 설문 중 1-3번 문항의 답은 통계로만 활용되며 4번 문항의 답은 '운동본부'가 <자원봉사자 집중 활동 선거구> 선정 시 귀 후보의 활용의사를 표시하는 자료가 됩니다. 각 문항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이번 선거에서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예 ()
- (2) 아니오 ()

2-1. (1번 문항에 '예'라고 답하신 분만 작성)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참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
- (2)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
- (3)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
- (4) 선거비용 절약을 위해 ()
- (5) 유권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
- (6) 기타 -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2-2. (1번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하신 분만 작성)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
- (2) 선거 전략상 비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
- (3) 선거법상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
- (4) 자원봉사자 모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
- (5) 자원봉사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
- (6) 기타 -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3.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한 담당자는 배치할 생각이 있습니까?

- (1) 예 ()
- (2) 아니오 ()

4.<무보수 선거자원봉사운동본부>에서 귀 후보에게 자원봉사자를 증계한다면 활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예 ()
- (2) 아니오 ()

● 설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지는 후보자 또는 선거책임자가 직접 작성하여 선거자원봉사운동본부에 팩스(02-393-1303) 또는 이메일(volun@volunteer21.org)로 12일(금) 16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사항

(2004. 3. 11)

질의자 : (사)볼런티어21 / KYC(한국청년연합회)

1. 돈 선거 방지와 후보자 및 유권자의 의식개혁을 통해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해 보고자 자원봉사시민단체와 언론사로 구성된 <무보수선거자원봉사운동본부>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희망하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접속해서 간단한 가입절차와 선거자원봉사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에 본 운동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운동본부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한 24개 선거구에 속한 모든 등록 예비후보자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이들의 출마의변, 약력 등)을 보고 자신이 활동가능한 봉사방법을 선택(지원후보, 봉사시간, 직무내역)하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바,

1-1. 이것이 현행 선거법 62조 “누구든지 인쇄물, 시설물, 기타 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위배되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2. 만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거자원봉사 희망자에게 참가방법을 안내하는 위 운동본부의 활동이 ‘광고물에 의거하여 선거운동하는 자를 모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면,

2-1. 위 운동본부가 자체 홈페이지 상에서 해당 선거구의 등록 예비후보 모두에게 공평한 게시 기회를 제공하고, 희망하는 후보자는 어떤 비용 지불도 없이 자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광고물이 아닌 게시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2-2. 현재 수많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행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3. 후보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각 후보자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이나 본 운동본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2-4. 이러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해석은 지난해 8월 중선관위의 발표내용 “우리의 선거문화가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의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

해서는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3. 만약 위 운동본부의 활동이 선거법 관련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3-1. 각종 신문 및 방송, 인터넷매체에 위 운동본부와 관련된 기사(취지, 추진현황, 국내외 사례, 참가자 소개 등)를 신거나 연락처를 게재(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해도 되는지, 그리고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 본 운동본부의 활동을 소개하거나 타 홈페이지에 본 운동본부의 배너를 부착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3-2. 또한 운동본부 발족식 때 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전원을 초청하여 이에 응한 이들과 함께 선거를 자원봉사자로 치르자는 공동의 협약식을 가져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4. 개정선거법에 의해 각 후보의 선거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직무 또는 할 수 없는 직무의 세부적 내역이 각종 후보자의 질의나 중앙선관위의 연구를 통해서 정리되어 있다면, 해당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첨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사항

(2004. 3.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1997. 7. 1 대법원 판결 97도1416의 판결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당시의 대법원판결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7항에 “누구든지 인쇄물, 시설물, 기타 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귀문의 경우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컴퓨터 통신에 게시된 "글"의 공선법 제93조제1항의 문서에 해당여부

컴퓨터 통신에 게시된 글은 컴퓨터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고, 전자기록으로 저장하거나 인쇄물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못지않게 선거의 공정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된 문서를 일반 인쇄물에 의한 문서와 특별히 구분할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

공선법 제93조제1항에서 말하는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문자에 대신할 수 있는 해독이 가능한 표시를 말한다. 그런데 컴퓨터 통신에 게시된 글은 컴퓨터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고 전자기록으로 저장하거나 인쇄물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글의 독자층이 그 글의 주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방임하게 되면 일반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에 못지않게 선거의 공정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된 문서를 일반 인쇄물에 의한 문서와 특별히 구분할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컴퓨터 통신에 게재된 글은 바로 공선법 제93조제1항에 규정된 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7. 7. 1 대법원판결 97도1416).



지정토론1

시민참여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장치이다

주 성 수 <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제3섹터연구소 소장>

시민참여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장치이다

주 성 수

(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제3섹터연구소 소장)

1) 선거참여 봉사활동은 지금의 소극적 봉사활동을 ‘적극적’ 봉사활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매우 소중한 활동이다. 지금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은 시민들이 ‘함께 더불어 하는 활동’(volunteering with)보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volunteering for)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전자는 쌍방적인 공동체 차원의 봉사활동이라면, 후자는 일방적인 개인적 차원의 봉사활동이다. 전자가 적극적인 시민권의 행사 활동이라면, 후자는 소극적인 이타주의 활동이라고 구분해볼 수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 누구나 선거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집단적으로 참여해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일이다. 따라서 발제자의 제안처럼 시민의 적극적인 선거참여 활동은 지금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국 자원봉사 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특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참여에 기초하는 참여민주주의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대의민주주의 불신을 받고 있는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는 의회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2002년 갤럽 인터내셔널이 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회와 정부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1%와 25%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또 2002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신뢰도에서 국회와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각기 13%와 12%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의 탄핵 정국 이후에는 아마도 한 자리 숫자인 바닥 수준에 추락해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정부와 정치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고 자신의 역할이 어떤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는 일종의 무력감을 갖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인, 로비스트, 언론 등 정치전문가에게 제자리를 빼앗기고 밀려나 정부와 정치에 대해 어떤 통제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은 시민의 견해와 관심에 부응하기보다 자신들의 편협한 이해에 사로잡혀 여론을 주도하며 정부와 정치를 부정적인 보도로 흥미를 일삼으며 결국 정부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선거에서도 선거 캠페인에 의해 시민의 정치적 선택이 왜곡되고 있다. 시민이 정치인

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정치인은 호응하지도 않는다.

또 심각한 문제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도 개인의 사익에 사로잡혀, 특수 이익집단의 이해를 대표하고 있을 뿐, 시민의 이익과 공익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참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시민의 직접행동 등의 집합적 참여를 경계하고 선거 등의 간접적 개별 참여에 제한시킨다. 대의민주주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의 선거참여 활동은 향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선거 자원봉사 활동은 부패하고 부정한 정치인을 감시하는 활동뿐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인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 시민운동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봉사활동이며, 후자는 국민주권과 시민권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고 구분해볼 수 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으로 돈안드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 서구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모금 등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운동에 참여하는 시민 자원봉사활동은 분명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4) 선거참여 봉사활동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 의사와 욕구는 최근 급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에도 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참여와 감시로써 극복하려는 강한 의욕을 보여준다. 2002년 한국갤럽과 볼런티어21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명 선거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국민이 20%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1)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답이 60%, 2)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겠다 27%, 3)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겠다 17.5%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2002년 7월에 조사한 것으로, 2002년 연말 이후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2002년 연말에 집중된 대통령 후보 및 정당 지지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던 시기 그리고 지금의 탄핵 정국 이후의 총선 지지활동을 감안해보면, 국민의 정치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 봉사활동의 의욕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력감을 가진 시민들과 정치적으로 냉소적이며 비판적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선거참여를 보다 자유롭게 개방시켜, 시민들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위해 모금활동을 하고 지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의 의욕과

열기를 제도와 정책으로 담아내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 된다. 사실 시민들 개인이 정당과 정치인을 자발적으로 찾아가 돕는 지지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원봉사 풀 시스템을 운영해서 자원봉사자 개인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찾아가 지지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가 이런 활동의 위법성을 지적해 시민참여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국회의 탄핵 가결에 비판적인 시민들이 특정 정당에만 몰려 봉사활동을 하는 우려가 있어 추진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저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시민의 선거참여를 부정시하는 관행도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지정 토론2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회의 활동

김 동 훈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회 사무처장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회의 활동

김 동 훈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회 사무처장)

1. 공선험 목적과 활동

공선험은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70 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한국 시민단체 협의회’가 중심이 돼 1991년 창립하였다.

공선험은 올바른 선거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다음과 활동을 전개한다.

- 깨끗한 선거정착을 위한 부정선거 감시활동
-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정책선거캠페인
- 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자질 검증활동
- 선거문화 혁신을 위한 유권자 의식개혁, 유권자 참여운동

2. 공선험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운동의 공정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공선험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에서 특정 정파나 정당으로부터 편파시비에 휩싸이지 않고 공정한 선거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 단체의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 단체의 공식 입장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있는 경우
- 단체의 공식 입장으로 특정후보의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법령에 의해 기본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

3. 공선협의 주요활동

- 1987~1991년 불벌 선거감시단 활동 및 공명선거 캠페인, 13대 대통령선거 감시 활동
- 1991. 2. 7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창립
- 1991. 6. 기초의회 선거 감시단 활동
- 1992. 3.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이지문중위 증언, 군부재자 투표개선운동
- 1992. 6부터 14대 대통령선거 감시활동
- 1992. 9. 한중수 연기군수 관권선거 개입 폭로
- 1996. 4. 15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운동
- 1997. 7. 25. 15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선협활동 발대식
- 1998. 4. 28. 6.4 지방선거를 위한 공섭협활동 발대식
- 2000. 2. 29. 16대 국회의원 선거 공선협 발대식
- 2000. 3. 17.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
- 2000. 4. 11. 투표참여를 위한 유권자 선언식
- 2002. 10. 27. 제16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실천 발대식
- 2003. 4. 8. 4.24 재보궐 선거 공명선거실천 발대식
- 2003. 7. 22. 공명 선거를 위한 유권자 오피니언리더 Workshop
- 2003. 9. 30. 정치개혁국민행동 발대식
- 2003. 10.1~2004. 2. 정치개혁을 위한 제반 활동,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운동 전개
- 2003.10.21~11.30 전국 유권자 정치교육 아카데미 Workshop
- 2004. 2. 17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발대식

4.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선협 활동 계획

1)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투표권 참여를 위한 활동

- 취지: 민주주의는 모든 유권자에게 평등한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 상대적으로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소외 당해온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유권자와 함께 ‘공선협 장애인 참여위원회’가 주관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 목표

- ▶ 장애인의 선거참여 권리와 기회의 평등보장
- ▶ 장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 ▶ 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운동을 전개

- ▶ 장애인이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 선거편의 방안과 투표기구 확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 ▶ 청각 시각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하도록 선거홍보물을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

- 주요사업내용

- ▶ 공선협 장애인참여운동본부 출범 및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
- ▶ 부재자 신고운동 전개
- ▶ 투표소 적정장소 설치
- ▶ 투표보조인제도 활용(장애인이 본인이 지정 2인을 동반할 수 있도록)
- ▶ 장애인의 선거과정 참여기회확대(투개표 참관인, 선거부정감시활동 등)
- ▶ 장애인 투표도우미 활동
- ▶ 입후보자 초청 토론회개최
- ▶ 장애인을 위한 정보매체의 다양화(위성방송, 인터넷 등)
- ▶ 수화와 자막방송, 점자투표 안내문 작성 송부 권장
- ▶ 투표안내 수화통역 도우미 배치
- ▶ 장애인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

2) 공명선거 및 선거참여를 위한 전국 국토순례 자전거 캠페인

- 목적

- ▶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이고 역동적인 모습과 친숙한 이미지를 대국민 홍보에 활용
- ▶ 17대 총선에서의 유권자 투표참여의식 제고
- ▶ 지역주의 극복과 정책선거 캠페인
- ▶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등의 홍보

- 사업내용

- ▶ 1차: 3.27-30일. 2차: 4.10-14일
- ▶ 부산과 목포 등에서 자전거 국토 순례단을 발대하여 전국을 순례하며 각 지역 공선협과 공동으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캠페인 전개

3) 대학 부재자 투표 운동

- 배경과 취지

정치개혁은 유권자에게 주어진 귀중한 한표를 행사하여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을 대표로 선출할 때 가능하다. 2002년 대선 당시 대학생들의 투표참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공선협 산하의 공선기위, SFC가 발의하여 진행된 대학생들의 부재자 투표소 설치운동은 YMCA, YWCA, 2003유권자네트워크 등이 가세하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었고 정치에 비판적이면서 정작 투표에는 무관심한 대학생과 젊은 층의 투표참여의식을 제고하였다.

총 39개 대학 37,000명이 신청하였고 대구대, 연세대, 서울대 대학내에 투표소가 설치되었다.

17대 총선을 맞이하여 각 단체별 활동으로 불필요한 중복과 낭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투표소 설치를 이뤄내기 위해 '대학 부재자투표운동본부'를 설립한다. 이는 정치에 냉소적인 20대의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방향

- ▶ 주민등록지를 떠나는 대학생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운동 전개
- ▶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지 못할 경우 대학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투표소 설치를 요구
- ▶ 시험기간 중 투표 기간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
- ▶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인 2천명 이하일 경우에도 투표소가 설치되도록 요구
- ▶ 대학생과 일반유권자들의 부재자 투표가 용이하도록 관련법 개정요구
- ▶ 대학 부재자투표자들이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클린존 운동

- 취지

그 동안 공선협이 전개해온 불법 부정선거 감시활동, 지역주의 극복, 후보자 토론회 개최, 정책대결, 공명선거 서약식, 선거비용 회계감사, 후보자 밀착 감시 등의 활동을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유권자 참여활동을 전개하고 각 지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 클린존 선포 기준

- ▶ 후보자 모두가 클린존에 동참한 지역구
- ▶ 지역 내의 시민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된 지역
- ▶ 활동에 필요한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 방법

- ▶ 서울, 부산, 목포, 대구, 청주, 속초 등 지역공선협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클린존 운동을 전개하고, “돈 안쓰는 선거구” “지역감정 없는 선거구” “정책선거구” 등의 지역에 맞는 이슈를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 각 지역 언론 방송사와 협력하여 클린존 운동의 홍보를 함께 한다.
- ▶ 공선협 본부는 전국에서 전개되는 클린존 운동을 종합하고 지원한다.

5)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6)공명선거 서약식

- 각 정당 대표, 각 지역 후보자

7) 각 정당 토론회 , 후보자 초청 토론회

8) 전국 부정선거 고발전화(1588-9849) 운용: 각 지역공선협과 연계.

9) 투표참여 캠페인

10) 올바른 선거와 투표참여를 위한 1,000 유권자 메일 릴레이

-공선협 산하 기구와 단체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하도록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혈연과 지연을 떠나 정책과 정당을 보고 투표하도록 권유하고, 후보자 채점표를 제공하여 각 후보의 정책과 경력을 비교하여 투표토록 한다.

11) 후보자 바로 알기 정보공개

- 공선협 사이트 후보자 바로알기 코너에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신상과 경력, 정책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과 인물위주의 선거가 되도록 돕는다.



지정토론 3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실과 방향

이 창 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실과 방향

이 창 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1. 선거자원봉사 운동을 둘러싼 논란

1) 1994년 여,야 법안

- 94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여, 야의 자원봉사지원법안이 등장
- 야당인 당시 국민회의 (대표발의 박상천 의원)측 법안은 ‘선거 자원봉사’를 ‘자원봉사’의 범주에 포함; 반면 여당인 신한국당 (대표발의 남평우 의원)측은 이를 포함시키지 않음.
- 당시 박상천 의원이 자원봉사지원법안 마련에 앞장 선 것은 “자원봉사자에게도 사회적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법안의 취지를 선거에도 적용, 야당이 불리한 돈 선거를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길 원했던 것. 박의원은 당시 개정 선거법 통과에도 주역으로 활동했었음.
-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안되고 1년후 국회 임기 끝나면서 여, 야 법안 자동 폐기 됨.

2) 1997년 행자부 법안 및 추미애 의원 법안

- 97년 행자부 주도로 9인 법안위원회 구성(위원장 김덕중 당시 아주대 총장), 자원봉사지원법안 재마련.
- 이때 ‘선거 자원봉사’는 자칫 자원봉사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니 자원봉사의 범주에서 제외하자고 결론 내림; 반면 ‘공명선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인정.
- 이후 동 법안을 수정, 추미애 의원이 법안을 마련할 때에도 ‘선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범주에서 뺐.

3) 2003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법안

- 2003년 6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창립되고 자원봉사진흥법안위원회(위원장 금창태)가

결성된 후 ‘통합법안’ 마련.

- 이 법안에도 ‘선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범주에서 제외함.

2. 발표자의 의견에 대한 토론

1) ‘선거 자원봉사’ 뿌리내리기 운동 취지는 공감

- 선거 후보자들이 자원봉사자에 의거, 깨끗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함은 당연한 명제; 최근의 개정 선거법 역시 그런 취지.

- ‘자원봉사’라는 용어 역시 좁은 개념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음; 실제 미국에선 ‘무보수 선거운동원’ 대신 ‘선거캠페인 자원봉사자’ (election campaign volunteer)라고 일반화해 사용.

- 발표자의 중립화 노력도 인정함.

2) 그러나 자원봉사계가 나서서 운동을 띄기엔 아직은 시기상조

(1) 사회 일반에 대해

- 마치 한국의 자원봉사계 (학계, 필드) 전체가 선거 자원봉사를 자원봉사 운동으로 인정, 지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음.

- 실제로 국민은 순수 자원봉사를 ‘공익’(public interest) 운동으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사익’(private interest) 운동으로 인식함.

(2) 자원봉사계 내부에 대해

- 선거 자원봉사 운동이 ‘정파적’ 운동이란 인식을 정치권에 줄 위험성이 큼 (아무리 각 당에게 공평하게 자원봉사자를 배치, 운영하겠다고 해도 특정 정당에 젊은 층이 몰릴 위험이 있음)

- 발표자의 소속 정당별 응답자의 경우만 해도 열린우리당이 11명, 민주노동당이 11명인 반면, 한나라당 등 야당은 7-8명 선).

- 정치권이 만약 그런 인식을 가질 경우, 현재의 자원봉사진흥법안의 국회통과는 상당기간 더욱 더 어려워질 위험이 큼 (거의 영구히 폐기 될 위험 있음). - (* 지난해 자원봉사법이 국회통과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임)

3. 향후의 방향

1) 사회 및 정치권의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 이번 개정 선거법과 선관위 활동 등으로 이제 모든 후보자의 선거운 동원은 자동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될 것임.

- 따라서 이번 선거 기간중 언론이 앞장 서 ‘깨끗한’ 선거 자원봉사(자)의 용어를 많이 퍼뜨릴 것.

- 이같은 정치권 및 언론에 의한 ‘자연적인 작업’이 얼마간 계속되도록 참고 기다려야 할 것 (토론자는 2-3번의 clean 선거가 치러지고 사회가 성숙해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봄).

2) 자원봉사계 전체의 의견을 묻는 작업있어야

- 앞으로도 ‘선거 자원봉사’를 자원봉사계가 앞장 서 추진해 갈 때는 자원봉사진흥법안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자원봉사계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임.

3) 낙천·낙선 운동에 대한 의견도 신중 기해야

- 또한 발표자가 주장하듯 낙천·낙선 운동도 자원봉사 운동이었다는 주장 역시 자원봉사계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서 말해야 할 사항임.

회원가입 안내

「한국자원봉사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래의 혜택을 드립니다.

- 정기포럼, 세미나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포럼의 연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매 회 포럼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 411401-01-115717 / 국민은행 예금주 : 금창태 [한국자원봉사포럼]
 가입비 : 30,000



(100-151) 서울특별시 중구 총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http:www.volunteerforum.org E-mail: kovof@hanmail.net

.....절 취 선.....

포럼 (회원) 입 회 신 청 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직장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팩스	
처	자택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p>본인은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2004.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p>					



제39회 정기포럼 자료집
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현실과 방향

발행일 : 2004. 4.

발행처

한국자원봉사포럼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58-1 청양빌딩 9층

Tel : 02-737-1082, Fax : 02-737-1083

e-mail: kovofo@hanmail.net
